


 금융위원회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금융감독원
보도	2018. 6. 5.(화) 조간	배포	2018. 6. 4.(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02-2100-2830)	담 당 자	윤 덕 기 사무관(02-2100-2835) 이 은 진 사무관(02-2100-2836)
	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기 한(02-2100-2990)		김 준 사무관(02-2100-2994)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양 진 호(02-3145-8070)		이 길 성 팀장(02-3145-8072)
	신협중앙회 이사 이 환 영(042-720-1004)		고 광 득 부장(042-720-1360)
	농협중앙회 상무 강 덕 재(02-2080-5055)		윤 해 진 부장(02-2080-3110)
	수협중앙회 상무 강 신 숙(02-2240-2040)		민 봉 식 부장(02-2240-2200)
	산림조합중앙회 상무 이 승 철(02-3434-7123)		임 성 훈 부장(02-3434-7230)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황 국 현(02-2145-9012)		박 도 형 본부장(02-2145-9200)

제 목 : 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 ※ ‘17.3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19.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 ②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 및 적용(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 선정 및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200억원 이상 조합 대상)
 -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 산출 및 활용 등

I. 추진 배경

□ '17.10.24.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 소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유도
-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 등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은행권은 '18.3.26.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며, DSR은 '18.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예정

□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18.4월부터 실무 T/F를 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18.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함(상호금융업권 자율규제)

*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상호금융 '18.7월, 저축은행·여전사 '18.10월)

〈참고〉 상호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경과

- ◆ '17.10.24.,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 * 신DTI 도입, 소금융권 DSR 단계적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현장점검 및 DB 구축('17.12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8.3월) 등 계획 발표
- ◆ '17.11.27., 금융위(원),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 *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18.3월), 제2금융권 추후 검토
- ◆ '18. 3.26., 은행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 ◆ '18. 3.27., 상호금융정책협의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계획 발표
- ◆ '18. 4. 4., 금감원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T/F Kick-Off 회의
- ◆ '18. 7.23., 상호금융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예정)

Ⅱ.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 도입

* $DSR(Debt\ Service\ Ratio) = \text{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text{연간 소득}$

가. DSR 적용대상

◆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

□ (적용대상) 신규 취급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예 외)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 등*은 동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

*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

나. 소득 산정방식

◆ 新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동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합 및 금고에게 자율성 부여

□ (소득산정)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을 산출하거나,

* 상품특성, 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합 및 금고 내규에 반영된 상품만 허용

-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高DSR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조합 및 금고 자율 판단)

* 향후 조합 및 금고별 高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

□ (소득증빙) '17.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동일

- (증빙소득)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 (인정소득) 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

- 농업인 :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
- 어업인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 인정소득은 추정된 소득액의 95%만 산정(한도 50백만원)

- **(신고소득)** 증빙·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 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소득 추정

* 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 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

- 또한,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주담대 한정)

※ 신고소득은 추정된 소득액의 90%만 산정(한도 50백만원)

은행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비교

은 행	상호금융
▪ (증빙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 좌 동
▪ (인정소득)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 좌 동 + α (농·어업인 소득 추정자료 추가)
▪ (신고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으로 하되,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3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최저생계비의 제한적 활용 가능	▪ 좌 동 + α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추가)

다. 부채 산정방식

◆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① **(주택담보대출)** 新DTI 기준과 동일(예: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 대출총액/25년 + 실제 이자부담액)
- ②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 ③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④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 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⑤ (기타대출*)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 제 부 담 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택 담보 대출 이외 기타 대출	전세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기타대출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주: 1)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2)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라. DSR 활용방안

◆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고 않고, 조합 및 금고가 여신심사
全流程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고객특성,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

○ **조합 및 금고가 차주그룹별(소득·신용도 등) 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취급**

-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및 금고는 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원리금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 감안

* 예) 高DSR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면을 적용(高DSR 대출 취급에 대해 조합 및 금고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

-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高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시범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高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19.上, 잠정)

2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 (Stress DTI 도입)

◆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하여 Stress DTI 산출

* Stress 금리 = Max(최근 5년간 매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 평균금리) - 최근월(1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매년 12월에 스트레스금리를 확정하여 1년간 활용)

- Stress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거나, Stress DTI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

※ Stress DTI는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19.1월부터 시행(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 변동금리 주담대는 Stress DTI 8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며, Stress DTI 적용의 일부 예외 허용*

* ①기존 일시상환 주담대를 즉시 분할상환 전환시, ②중도금대출, ③이주비대출, ④상속·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시, ⑤실직·폐업 차주의 거치기간 설정 재약정

Ⅲ.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내용

1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

* $RTI = \text{연간 임대소득} / (\text{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text{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임대소득) 임대건물 혹은 사업장별 임대차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

* 임대보증금은 간주소득(평균예금금리 적용)으로 인정해 임대소득에 합산

□ (이자비용)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상승에 대비한 Stress 금리 가산

* $\text{Max}(\text{최근 3년간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 취급 월별 가중평균금리}) - \text{최근 월 공시 금리}$. (단, 1%p 미만인 경우 1%p 적용)

※ Stress 금리 적용은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19.1월부터 시행(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 해당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대출 이자상환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대출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 적용

□ (활용방법)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시행경과에 따라 취급기준 재설정 가능)

○ RTI 기준 미달시에도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조합 및 금고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 (예외사유)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

* 가이드라인 시행 후 취급된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 적용

나.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예)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인 상가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6억원은 만기일시상환, 2억원은 매년 1/10 분할상환

-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 신규 대출(운전자금대출 제외)
- **(적용기준)**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유효담보가액 기준 설정
 - 대출 취급후 조합 및 금고의 유효담보가액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만기시까지 기존 분할상환방식 유지(단, 만기 연장시 변경 가능)
- **(분할상환 주기)** 1년 이내의 기간 중 조합 및 금고가 차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예외사유)** 1억원 이하 대출, 상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허용

2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 **(적용대상)**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 대상
 - * '17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는 511개로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약 78.9%를 차지
 -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관리가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반영

- **(관리업종)** 조합 및 금고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 선정
- **(한도설정)**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추이, 업종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 설정
 - 한도는 1년 단위로 매년 설정하되, 긴급한 사유 발생시 최종 결정권자의 결의를 통해 한도 재설정 가능
- **(관리방법)** 조합 및 금고는 관리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한도 근접시 여신취급 기준 강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중앙회는 개별 조합 및 금고의 관리업종 선정, 한도설정 및 관리방법 등 편중리스크 관리 제반업무 지도·감독

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 Loan to Income)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

* **LTI** = **총 금융권 대출총액(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소득**

- **(차주 대출총액)** 차주의 총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하여 산출
- **(차주 소득)**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합산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LTI 활용)** 조합 및 금고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 **(사후관리)** 조합 및 금고는 차주의 대출총액, 소득정보, LTI 비율 등을 전산관리하고,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
- **(적용시기)** 심사의견 기재 등 LTI 활용은 '19.1월부터 시행 (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IV. 기대효과

1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
 -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 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 제도 설계로 조합 및 금고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2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및 쏠림현상 완화

-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 관리업종(3개) 선정 등을 통해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공급 유도
 -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의무화 등 부동산임대업 리스크 관리 강화

V.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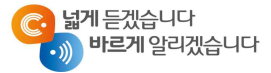
-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 운영
-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 및 금고 창구의
질의 및 고객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
- 아울러,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고객의 상담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조합 및 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 실시

(붙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Q&A 1부.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목 차

I.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1. DSR을 도입함으로써 당장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인지? ..1
2. DSR도입으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서민 대출 취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2
3. Stress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는지? ..3
4.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개별 조합 및 금고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3

II.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5.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4
6. RTI 시행에 따른 효과는?5
7. 업종별 한도설정으로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5
8. 업종별 대출한도에 도달하는 경우 여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6

1.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당장 개인별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인지?

- ☐ DSR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리스크 관리지표로써
 -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결정은 금융회사가 차주별 특성, 신용상태 및 기여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 따라서,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님

2. DSR도입으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서민대출 취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 ☐ DSR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로 DSR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저신용자 대출취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다만, 高DSR 대출에 해당되어 상환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 대출을 거절할 수 있으며,
 - 高DSR 대출 취급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리스크 관리에 활용(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상 포함, 론리뷰 등)
- ☐ 또한,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서민금융상품 등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

3. Stress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는지?

- ☐ Stress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님
 - Stress 금리란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대하여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합 및 금고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임
- ☐ 'Stress DTI' 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로서 실제 적용금리와는 관계가 없음

4.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개별 조합 및 금고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 개별 조합 및 금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 Stress 금리 산출 및 DSR 활용방안* 등은 중앙회가 관리·마련하고 개별 조합 및 금고는 여신심사에 활용

* 대출한도 설정, 高DSR 관리 등

5.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 ☐ 임대업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TI), 일부 분할상환제도 등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만 적용되나,
 -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소득대비대출비율(Loan to Income, LTI)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됨
 - * 단, LTI는 1억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
- ☐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취급되는 건에 적용됨

6. RTI 시행에 따른 효과는?

- ☐ RTI 제도는 담보가치 위주의 심사를 통해 대출이 취급되어 오던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한 것으로,
 -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 취급이 어려워져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7. 업종별 한도설정으로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조합 및 금고가 특정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며,
 - 개별 업종에 대한 여신 한도는 개별 조합 및 금고가 여신 편중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임

8. 업종별 대출한도에 도달하는 경우 여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 조합 및 금고가 업종별 대출한도에 도달하기 전부터 한도를 관리하여 급격하게 여신이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 업종별 대출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도 사전에 정한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출 취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 여신한도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출취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